

에너지 전환 특자도 특례 발굴 공감대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민주 전북도당과 특례 발굴 정책토론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탄소중립도시 조성 특례 등 제시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공동으로 도의회의 원초회의실에서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마련한 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탄소중립위원회와 공동 주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추진방향,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전라북도 기후위기대응 현황 및 특례발굴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문상진 두산퓨얼셀 본부장 이종의 전북대학교 교수,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진형석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유충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영상 인사를 통해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북이 그동안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한 수소산업에 중심으로 탄소중립분야 특례발굴이 중요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할 제도적·환경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축사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니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대안 마련에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남정 전북연구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초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탄소중립 특례 사례를 비교하며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아이템으로 전라북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탄소중립 도시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육성 특례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문상진 두산퓨얼셀 본부장은 "전기차나 수소버스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단지 및 탄소중립 도시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육성 특례 등을 제시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탄소중립 경제사회의 도래를 맞아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해외·국내 에너지전환 정책과 발맞춰 수소·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집행실 위원(전주)은 "온실가스 감축제도 등에

대한 규제 특례에 담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이종의 교수는 "농부권

거래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간접사업 발굴과 상해배출권 인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한정수 위원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며 에너지 전환은 경제문제도 전북도의 미래 성장동력도 맥을 같이 한다"며 "그 동안 전북이 육성해온 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제도들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마련해 나가면 전라북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친환경 도시 '새만금'

새만금지역 개발 가속화 됨에 따라 야생생물군락지 등 2030년까지 조성

그간 더디기만 했던 새만금지역은 용지매입 속도가 빨라지며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 되는 등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청 이후 역대 최대의 기업 유치 실적(21개 기업, 전체실적의 42%)을 달성했으며, 1조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확정됐다. 여기에 남북도로 1단계가 개통돼 기업이 북적대는 새만금이 실현되고 있다.

이는 가속화되고 있는 새만금개발 속에서 환경생태용지 조성에 의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4단계로 나눠 49.8㎢ 규모(새만금 용지면적의 17.1%)로 조성(소관부처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중이다.

2-1단계 조성사업(3.57㎢)은 환경생태 용지 중 최대 규모이며 새만금 내 호와 인접한 지역으로 염생식물천이지, 야생생물군락지, 생태습지 등을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삼,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연도인 2021년 386종, 2022년 430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내부개발 영향으로 축소되고 있는 야생생물 서식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환경생태용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가법계 산책할 수 있는 3종의 산책로(최대 3.0km)와 마음껏 뛰어 놀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코스(1.1km),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코스(2.3km)도 조성되어 있어 넓은 지평선을 보면서 한 바퀴 돌다보면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 오는 7월 준공되어 시흥팔달 새만금 십자항(+) 도로가 완성되면 교통의 이점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편리하게 생태대지를 방문할 수 있다.

새만금 생태대단지 인근에는 새만금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른 국내 유일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오는 7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연계하기에 좋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용지개발 가속화와 핵심 기반시설 구축, 투자여건 조성 등의 변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활력 있는 도시기반이 꾸려지고 있다. 새만금은 생태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친환경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재훈기자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박용근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전북도의회 가도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387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걸음마 수준인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령친화산업 추진 단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와 용품 또는 의료가, 노인을 위한 의약품, 노인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화장품, 식품 및 급식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등을 망라하고 있고, 관련 법령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경우 이미 2006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19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남, 경북에 이어 노인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등 관련 자료조사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어르신들의 질 높은 노후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11건 부의안건 심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 결정 철회 결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8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22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북지방환경청의 국민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기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1차 심의가 개최됐다"면서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과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국비 102억 확보

지역형 플러스 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공모 선정

조선업·농업·신성장산업 등 3705명 일자리 창출

전북도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국비 확보액 75.5억원 대비 34.5%가 증가한 102억원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으로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전북도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역형 신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고용유지 대응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전북지역인력지원개발위원회, 캠퍼스종합기술원, 전북신화학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일자리 유관 기관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에 총력을 다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세부사업으로 우선 지역혁신프로젝트 9개 사업에 국비 17.6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생명·식품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성장 산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 거버넌스 협력 등을 통한 구인난 해소 등 총 9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군산발 자동차산업의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가 인근지역(익산 김제, 완주)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자동차산업 위기 근로자 고용유지와 농식품·신기술산업으로 이·전직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2개 사업에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고용부 시범사업으로 도시 유류인력과 농민기 일손부족 농가를 매칭하는 도농상생 일자리사업이 전국에서 최초 시행하며 큰 호

응을 얻어, 올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추진한다. 조선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와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사업비로 국비 14억원 확보했으며, 조선업 취업장차금, 응접·도장교육, 구직매칭 등을 지원한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는 군산 주력산업인 전기차·이차전지분야 취업연계를 위한 직무교육, 취업캠프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3,705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특히 주력 산업인 농업·조선업 분야 구인난 개선은 물론 지역특성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와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무교육, 취업캠프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고용부-전북도-수행기관 간 업무협약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시민사회 원로 11인

강성희 전주를 후보 공개 지지

평화의 소녀상을 제정한 김관수 통일 원로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 원로 11인이 오는 4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박창신 신부, 이광석 전 전농의장, 최재훈 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등 원로들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전북 정치의 미래를 위해 강성희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현 정권을 무도한 정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오만하다고 싸잡아 비판하고 "이제 어반의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원로들은 "강 후보는 비정규직의 실용에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이 됐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택배 노동자의 길을 택한 후보"라며 "이번 재선거는 제도장치가 고장 난 채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 세우고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 하기에 국민의힘에게는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탈당 인사들을 겨냥해 "배판 되면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광분하는 철새 정치꾼도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원로들은 "전주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해 줄 일당백의 후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온몸을 바치려는 따뜻한 정치가는 강성희 후보"라며 "강성희 후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서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기관 워크숍

전북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특성 연구 등 사례 발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서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내 서남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환경연구소(충청권, 호남권, 전북권, 제주권) 및 전북, 광주, 충남, 전남,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약 4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남부권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결과 발표, 향후 공동연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연구자 간 교류 시간을 가졌다.

각 기관들은 △전북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특성 연구,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분석, △서남단 배경지역 후산도 PM2.5 분포 특성 연구, △충청권 초미세먼지 오염도 특성, △광주지역 미세먼지의 PAHs 분포 특성 및 발생원 추정, △제주 도심지역 극초미세먼지(PML0)의 농도특성 연구 등 각 지역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사례들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내용은 미세먼지의 지역별 특성 및 지역 현황,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전북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공동연구 추진 및 기관 간 교류 활성화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모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